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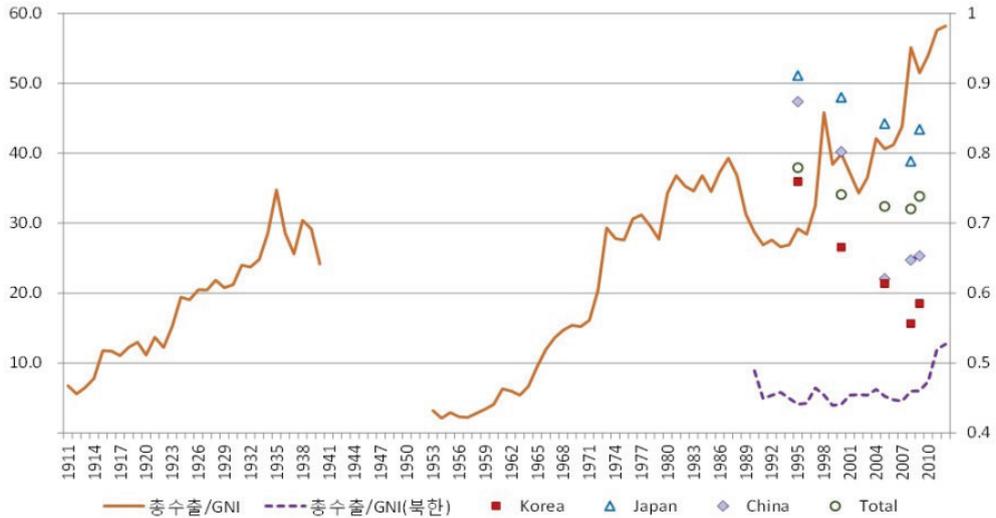
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 자본주의⁽¹⁾

김 낙 년

이 토론은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자본주의의 주요 논점을 제기하면서 그와 관련되는 개소에서 각 발표에 대해 논평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 역사적 관점이란 현재를 장기추이 속에서 파악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상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놓여진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관점은 제도나 환경 그리고 발전 국면이 다른 자본주의를 역사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기를 관통하는 어떤 일반법칙을 상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Marx의 ‘절대적 일반법칙’(정성진, 이하 발표자의 경칭 생략)이나 Piketty의 ‘기본법칙’(정태인)은 구체적인 역사현실을 설명하는 많은 요소 중의 하나일 뿐, 그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첫째, 한국 자본주의의 대외의존성과 관련된 논점이다. 이영훈은 특히 일본과의 무역에서 조립형 공업화의 특질을 강조하고 있고, 정성진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가 세계화의 심화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양자 모두 무역 의존도가 근래에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림 1>은 수출 의존도(= 총수출/GNI)의 장기추이를 보인 것이다. 무역은 단순히 물자의 교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진 기술과 제도를 접하고 학습이 일어나는 장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는 수출의존도에서 한말 수준으로 후퇴했고, 식민지기는 비록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지만 무역을 통한 대외접촉과 학습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고도성장기는 주지하듯이 수출이 경제 성장을 주도한 시기였다. 이와 같이 한국 자본주의는 개방체제를 통해 발전했고, 그

(1) 본고는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2014년 12월 16일 개최한 학술대회, 21세기 한국자본주의 대는 쟁에서 발표된 내용의 요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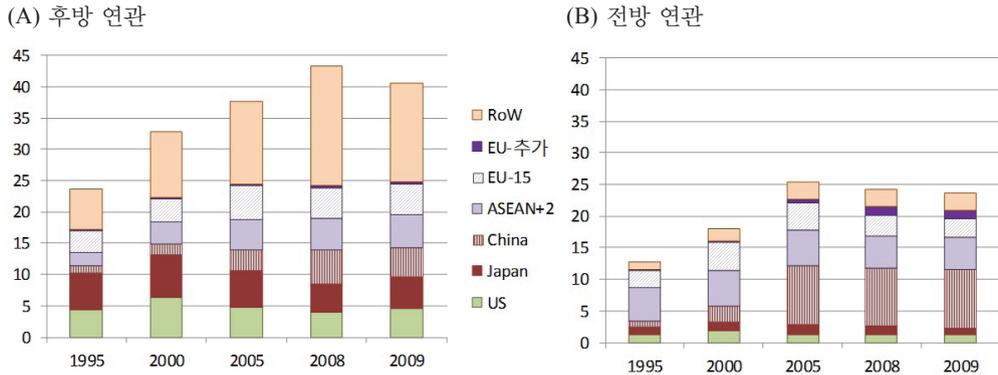
주: 수출 의존도(%), 왼쪽 눈금), 부가가치수출/총수출 비율(오른쪽 눈금).
 자료: ECOS; KOSIS; 김낙년 편(2012); 김낙년(2014a).

〈그림 1〉 한국의 수출 의존도와 각국의 부가가치 수출의 비율

역동성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1990년대 중엽 이후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수출의존도가 다시 급상승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그림 1〉에 총수출 중에서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을 제시하였다. 수출 중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중간재가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 것이 부가가치 수출이 된다. 부가가치 무역(trade in value added)은 OECD와 WTO가 1995년 이후 각국의 산업연관표와 무역통계를 결합하여 추정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이 시기에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이 주목된다. 이 시기 수출품 생산을 위한 공정(tasks)이 한 수출국 내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일부가 국경을 넘어 분산(fragmentation)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에 따라 무역품이 국경을 두 번 이상 넘어 무역통계가 이중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 점을 감안하면 〈그림 1〉에서 총수출 기준의 수출 의존도의 급상승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정의 분산 또는 수직 전문화(vertical specialization)는 그림에서 한 중일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의 급속한 하락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동아시아에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림 2〉는 한국의 수출에 다른 나라의 중간재 수입이 얼마나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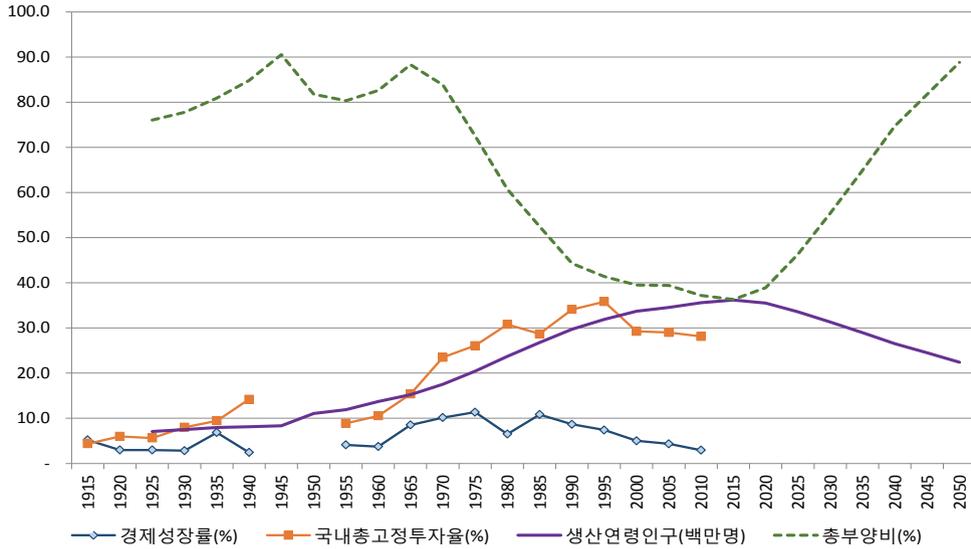


주: 'ASEAN+2'는 ASEAN 국가에 대만과 홍콩을 더한 것이다. 'EU-추가'는 근래에 가입된 동유럽 국가를 말한다.
 자료: 김낙년(2014a).

〈그림 2〉 한국 수출의 후방 및 전방 연관(단위: %)

함되어 있고 그 중간재가 어느 나라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꾸로 한국의 수출이 다른 나라 수출의 중간재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전자를 수출의 후방 연관, 후자를 전방 연관이라고 한다)를 보인 것이다. 먼저 한국 수출의 후방 연관을 보면, 일본의 비중이 RoW(나머지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가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RoW는 한국에 주로 원유를 비롯한 자원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 이들의 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한국 수출의 전방 연관은 후방 연관에 비해 낮지만 빠르게 상승하였는데, 그것은 특히 중국의 수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영훈은 한국 공업화가 일본의 중간재에 의존하는 조립형 공업화라는 특질을 강조했지만, 이를 무역의 부가가치 사슬(value chain)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해 볼 수 있다. 즉 수출품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일본은 부가가치 생산의 상류에 해당하고, 이를 조립 가공하는 한국과 ASEAN은 그 하류, 마지막으로 그 최종 소비지에 미국이 위치하는 지역간 무역구조가 1995년까지 성립되어 있었다. 그 후 중국이 이 부가가치 사슬의 하류를 파고 들어옴에 따라 한국은 그보다는 상류 쪽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중층화된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구조는 중화학공업 또는 중간재 중심으로 고도화하였지만, 그 반면 하류에 해당하는 특히 노동집약적인 수출품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따라 총수출 증가가 국내의 고용증가로 연결되는 고도성장기에 나타났던 연관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것은 한국 무역이 선진국을 c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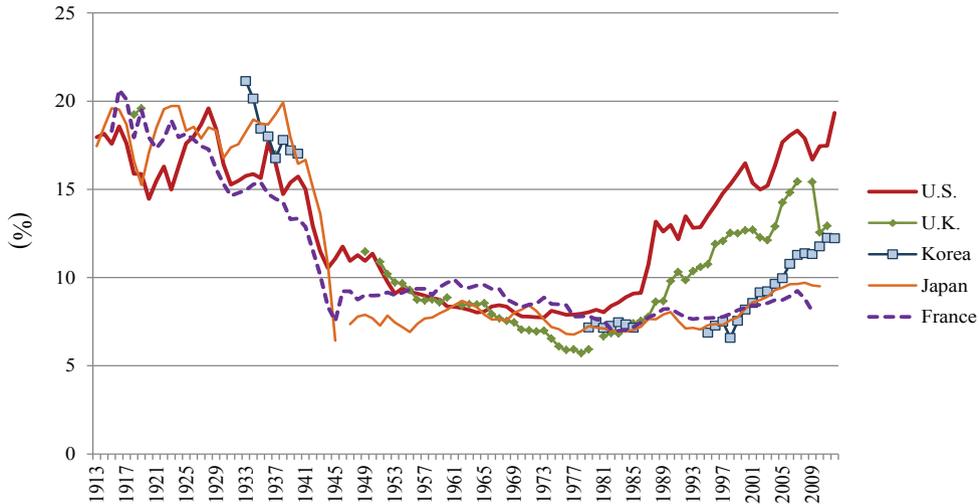
주: 해당년을 중심으로 하는 5년 평균값이다.
 자료: ECOS; KOSIS; 김낙년 편(2012).

〈그림 3〉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투자율 그리고 인구변천

up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중국과 같은 후발국에 의해 catch up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는 위상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투자율의 장기추이에 관한 논점이다. 〈그림 3〉은 경제성장률과 고정자본투자율과 함께 생산연령인구(15~64세) 및 총부양비의 장기추이를 제시하였다. 생산연령인구는 그 동안 빠르게 증가해 왔다가 앞으로는 빠르게 감소해갈 전망이다. 총부양비는 이와 반대로 현재를 바닥으로 하여 U자형을 그리고 있다. 1960년대 이전에 총부양비가 높았던 것은 부양할 유년 인구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며, 앞으로 고령화의 가속화가 2050년까지 총부양비를 빠르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성장기는 생산연령인구가 급증하고 총부양비가 빠르게 하락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은 이 시기 저축률과 투자율이 급상승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Bloom and Williamson(1997)은 1965~95년에 걸쳐 특히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인구변천의 효과가 이들 지역의 높은 성장률 중에서 1/3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가 있다.

이렇게 보면 고도성장기는 역사적으로 인구변천의 특정 국명과 겹치면서 그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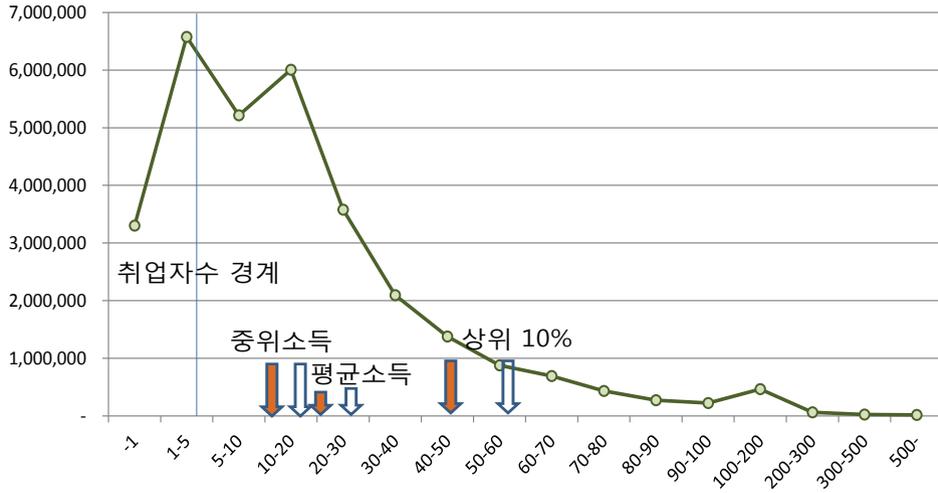


자료: The World Top Income Database.

〈그림 4〉 상위 1% 소득 비중의 국제비교

보너스(bonus)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거꾸로 인구구조가 경제성장
에 크게 부담(onus)이 되는 국면으로 바뀌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환위
기 이후 투자율의 하락에 대해 이근은 성장의 주역이었던 대기업이 영미의 금융자본
에 의해 포획되면서 저투자율의 경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흥미로운 해석이
지만, 외환위기 직전에 도달한 한국의 투자율은 이미 국제적으로 예외라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 일본과 대만도 한국보다 한발 앞서 투자율의 하락이 시작되
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대만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아 영미의 금융
자본에 포획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인구변천에서는 한국보다 한번 앞서 유사한 추
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율의 하락 추이는 동아시아에 공통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셋째, 소득분배에 관한 논점이다. 〈그림 4〉는 상위 1%가 전체소득의 몇 %를 차지
하고 있는지를 장기에 걸쳐 보여준다. 상위 0.1% 또는 상위 10%의 경우에도 그 양상
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자료의 제약으로 한국의 경우 고도성장기가 공백으로 남아 있
지만, 근로소득에 한정된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1963년까지 시계열을 연장할 수 있
다[김낙년(2012)]. 그에 따르면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1960년대 이후 5% 대로 안정
적으로 추이하다가 1990년대 중엽부터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주: 1) X축의 소득구간의 단위는 백만원.

2) 전체 소득자 기준의 중위소득, 평균소득, 상위 10% 소득은 빨간 화살표, 취업자수 기준의 각 소득은 흰 화살표로 각각 나타내었다.

자료: 김낙년(2014b)

〈그림 5〉 전체 개인소득자의 소득구간별 분포(2010년, 단위: 명)

은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U자형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해방 전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보였지만, 해방 후 급락하였다. 일본인이 철수하고 농지개혁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는 이러한 격차 사회의 해소를 전제로 하여 고도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기는 성장의 효과가 저변으로 널리 파급되어 성장과 분배가 양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0년대 중엽 이후 불평등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거기에는 성장이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이 어려워진 점,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된 것과 소득세의 누진 과세가 후퇴한 점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근래에 영미형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성진은 고도성장기 ‘초과착취’가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기는 오히려 각 소득계층의 소득이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은 상위의 소득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그림 5〉는 2010년의 소득세 자료 등에 의거하여 추정된 전체 개인소득자의 소득구간별 분포를 보여준다. 개인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전(before tax) 소득이다.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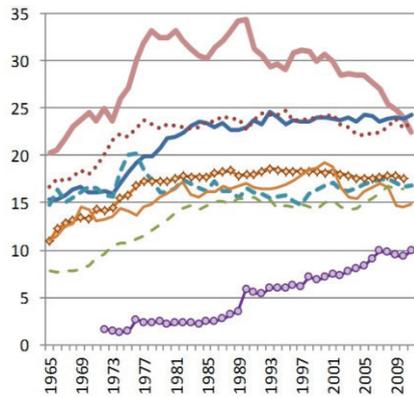
체 개인소득자는 3,122만명에 달하며, 취업자수 2,383만명보다 훨씬 많다. 그 차이는 재산소득만 가진 경우도 있지만, 1년 중 평소에는 비 경제활동인구로 있으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시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설명된다. 취업자로 한정하더라도 그 하위 10%의 연평균 평균소득은 400만원이 되지 않아 취업자와 비 경제활동인구의 경계가 모호함을 알 수 있다. 1,0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전체 취업자수의 32.3%나 되고, 취업자의 평균소득이 2,640만원인데 비해 중위소득은 그 60.4%인 1,59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 추이를 보여주지 않지만, 김낙년(2012, 그림 10)은 가계조사와 소득세 자료에 의거하여 근로소득자의 하위 20%와 하위 40%의 실질 평균소득을 구해보면 1996년 이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상위 10%의 평균소득이 고도성장기 때의 상승추세를 계속 이어간 것과 대조된다. 즉 한국의 소득 분배는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악화되어 왔는데, 그것은 단지 상층으로의 소득집중이 높아졌다는데 그치지 않고 하위 소득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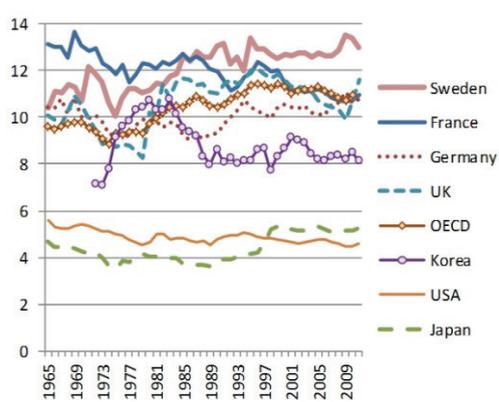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복지재원의 부담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논점이다. 전술한 소득 분배는 세전 기준의 개인소득이며, 실제의 소득은 여기에 조세나 공적 이전소득을 감안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이 늦었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소득재분배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앞으로 한국은 급속히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재원을 조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질 것인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림 6>은 OECD 조세통계에 의거하여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조세 비중의 추이를 보였다.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OECD 평균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스웨덴과 프랑스 독일이, 평균 아래쪽으로는 영국, 미국, 일본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거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급속히 상승하여 격차를 좁히고 있다.

그런데 소비세에서는 유럽 국가가 OECD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거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비교적 이른 시기(1977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으며 두 그룹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복지지출이 높은 유럽의 고 복지국가(스웨덴, 프랑스, 독일)는 그 재원에서도 개인소비세 및 사회보장기여금뿐만 아니라 소비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에 대해

(A) 개인소득세 + 사회보장기여금



(B) 소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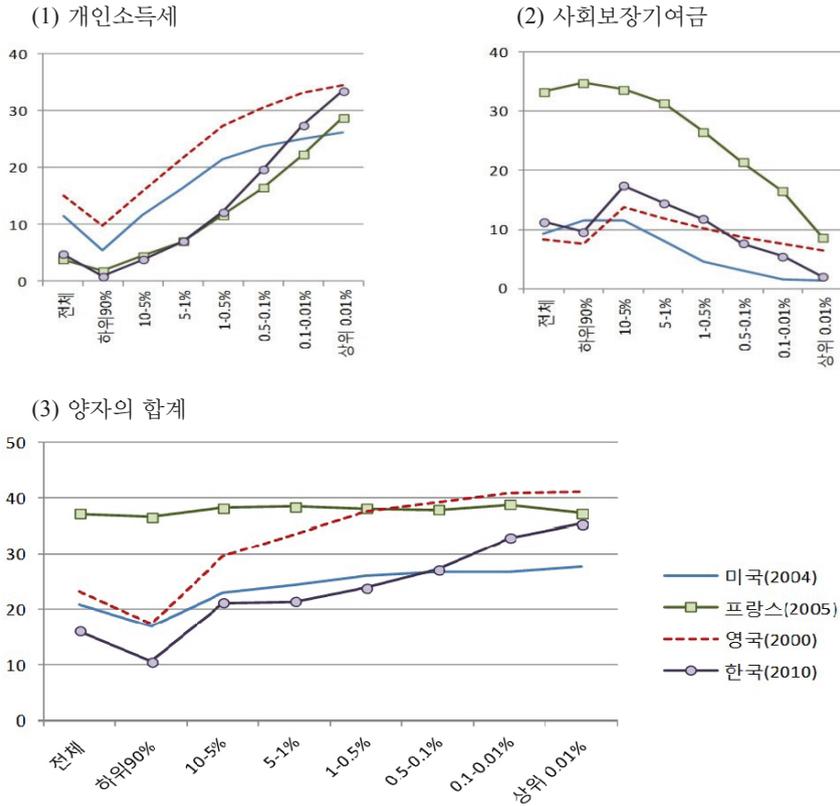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그림 6〉 GDP 대비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단위: %)

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과 일본은 재원에서도 개인소비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비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소비세는 소득세와 달리 규모에 따른 세율의 차등 없이 단일세로 부과되는데, 상층으로 갈수록 소득 중에서 소비의 비중이 작아지므로 소득 대비로 보면 역진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률은 계층간에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림 7〉은 2010년의 한국의 계층간 부담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것이다. 먼저 개인소득세의 전체 부담률은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한국과 프랑스가 낮은 편이다. 이를 계층별로 보면, 모두 누진과세의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과 프랑스에서 계층간 부담률의 차이가 더 크다. 그것은 주로 하위 90%의 부담률이 미미하였기 때문인데, 그것은 소득공제가 널리 인정되어 하위 소득자 중에 면세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사회보장기여금(연금, 의료, 실업, 산재 보험료를 뜻하며 가입자뿐만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사용자의 부담금도 포함한다)에서는 프랑스의 부담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프랑스는 소득세보다는 이 사회보장기여금 형태로 복지재원을 조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담률은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률이 떨어지는 역진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보험료 납부에서 소득의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프랑스 정도는 아니지만, 개인소득세보다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률이 더 높으며, 특히 하위 90% 구간에서 그러하다. 양자를 합해 보면, 개인소득세의



자료: 김낙년(2014c).

〈그림 7〉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의 국제비교(단위: %)

누진성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의 역진성이 상쇄되어 계층간의 부담률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특히 프랑스는 계층간의 부담률 차이가 거의 없는 양상을 보인다.

복지지출이 높은 나라일수록 재원을 누진적인 방식으로 조달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계층간 부담률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소비세와 같은 역진적인 방식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편적 복지와 보편적 과세가 대응하여 서로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서는 보편적 과세의 도입이 그만큼 어렵고 과세체계가 더 누진적인 특성을 보이게 된다. Lindert(2004)는 이러한 역설에 대해 복지지출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재원 조달의 효율성이 더욱 중시되지 않을 수 없고, 자본과세의 경감과 함께 단일세(flat tax)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전화: 02-2260-3273
E-mail: nnkim@dongguk.edu

참고문헌

- 김낙년(2012):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18, 2**, 125-158.
- 김낙년(2014a): 「세계와 한국의 무역동향」, 『무역의 성장과 경제사회의 변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근간).
- 김낙년(2014b):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2014-08.
- 김낙년(2014c):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계층별 부담률: 장기추이와 국제비교」, 『경제사학』 **57**, 81-113.
- 김낙년 편(2012):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 Bloom, David E., Jeffrey G. Williamson(1997): “Demographic Transitions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NBER Working Paper 6268.
- Lindert, Peter H.(2004): *Growing Publ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2012): *Revenue Statistics*, OECD Publishing.
- The World Top Income Database(<http://topincomes.parisschoolofeconomics.eu/>).